

경찰, 백남기 농민 시신부검 영장 신청...유가족, 부검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

변백선 기자 | 승인 2016.09.26 00:21

백남기대책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있을 때까지 장례를 치를 수 없다"



© 변백선 기자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과 백남기농민대책위, 국회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이 경찰의 백남기 농민 검사가 끝난 후인 25일 오후 기자 브리핑을 갖고 있다. 검시에 함께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애초 진단되었던 뇌골절과 안와골절, 광대부위 다발성 골절 등으로 어긋나는 소견 없었다. 검시에 참여한 법의관도 외상으로 인한 급성경막하출혈이 사망원인이라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며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망원인이 '외상성뇌출혈'이라는데 이견이 없어 부검이 필요없다"고 재차 밝혔다. © 변백선 기자



© 변백선 기자

백남기 농민 유가족인 백도라지 씨가 검찰의 백남기 농민의 검사가 끝난 후인 기자 브리핑 자리에서 "아버지가 300일 넘는 생명연장 기간을 지내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어제 오늘 벼원 돌레를 경찰이 둘러싸고 있는 건 돌아가신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며 "가족들은 아버지가 가시는 길이 편안하게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고 부검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울먹이며 전했다. © 변백선 기자



© 변백선 기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안치실에서 유족대리인, 대책위, 검사, 국과수 관계자 측이 검시를 시작하기 전 고인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변백선 기자

백남기 농민의 검사를 끝낸 검사와 국과수 관계자, 국회의원들이 병원을 나서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변백선 기자

경찰이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시신부검 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노동, 농민, 빈민, 청년학생, 시민사회단체 등이 서울대학병원 장례식 주위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백남기대책위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있을 때까지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밝히며 "백남기 농민이 안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에서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 변백선 기자



© 변백선 기자

경찰이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시신부검 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노동, 농민, 빈민, 청년학생, 시민사회단체 등이 서울대학병원 장례식 주위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백남기대책위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있을 때까지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밝히며 "백남기 농민이 안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에서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 변백선 기자



© 변백선 기자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열린 촛불추모제에서 시민 1000여명이 백남기대책위가 마련한 검은 리본을 달고 "백남기를 살려내라"며 외쳤다. © 변백선 기자



© 변백선 기자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열린 촛불추모제에서 시민 1000여명이 백남기대책위가 마련한 검은 리본을 달고 "백남기를 살려내라"며 외쳤다. © 변백선 기자



© 변백선 기자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열린 촛불추모제에서 시민 1000여명이 백남기대책위가 마련한 검은 리본을 달고 "백남기를 살려내라"며 외쳤다. © 변백선 기자



© 변백선 기자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열린 촛불추모제에서 시민 1000여명이 백남기대책위가 마련한 검은 리본을 달고 "백남기를 살려내라"며 외쳤다. © 변백선 기자



변백선 기자 n7349794@naver.com